

별첨

이 자료는 2013년 4월 16일(화)
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
2013년 추가경정예산안

2013. 4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기본방향	2
III. 추경규모 및 재정총량	3
IV. 주요 역점사업	6
V. 기대효과	13
[참고] 12대 분야 자원배분 변동사항	14

I. 추진 배경

□ (경제여건)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

○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비 성장률이 1%를 하회

< 최근 성장률 추이 >

(단위 %)	'11년					'12년				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
▪ 전기비	3.6	1.3	0.8	0.8	0.4	2.0	0.8	0.3	0.0	0.3
▪ 전년동기대비		4.3	3.5	3.6	3.4		2.8	2.4	1.6	1.5

○ 가계부채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 취업자 증가세*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

*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('12.10)40 (11)35 (12)28 ('13.1)32 (2)20

□ (재정여건)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입부족, 당초 계획된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

* '13년 GDP성장률 전망 : 3.0% → 2.3% ('13년 경제정책방향, '13.3월)

○ 하반기 세입부족 현실화시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을 못하게 되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곤란

- 상반기 적극적인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 부족

○ 본 예산 확정이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 지원소요, 안전 대책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출 소요 발생

⇒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추정 추진

II. 기본 방향

□ (규모)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 편성

* '98년 및 '09년 금융·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최대 수준으로 편성

○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 보전

○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

□ (중점분야)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

① 경기회복 지연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·중산층, 중소기업 및 지방에 대한 지원 강화

②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,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

- 창업 및 인력양성 등 경제활력을 위한 인적투자 지원

③ 중소·수출기업 자금지원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

④ 4.1 부동산 대책 등 본예산 확정이후 발생한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소요 반영

⇒ ① 민생안정·일자리, ② 중소·수출기업 지원,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

Ⅲ. 추경규모 및 재정총량

1. 추경규모 : 총 17.3조원

□ (세입경정)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

○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: △6조원

○ 산은·기은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: △6조원

* (산은) 국회의 보증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매각 곤란 : △2.6조원

* (기은)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매각지분 축소 : △3.4조원

□ (세출확대) 5.3조원

○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,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 (Policy Mix)을 고려한 수준

※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(2조원) 포함시 총 세출확대 규모는 7.3조원

□ (추경재원) 한은잉여금 확대(0.2조원), 세출감액(0.3조원), 세계 잉여금(0.3조원)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

2. 재정 총량

□ (총수입) 당초 본예산 대비 △11.8조원 감소한 360.8조원

* △11.8조원 = 세입감액 △12조원 + 세외수입(한은잉여금) 0.2조원

< 총수입 >

(조원, %)

	'12	'13당초 (A)		'13추경안(B)		증감 (B-A)
			증가율		증가율	
◇ 총수입	343.5	372.6	8.5	360.8	5.0	△11.8
○ 예산	234.0	253.3	8.2	241.5	3.2	△11.8
▪ 국세	205.8	216.4	5.2	210.4	2.3	△6.0
▪ 세외수입	28.3	36.9	30.5	31.1	10.0	△5.8
○ 기금	109.5	119.3	8.9	119.3	8.9	-

□ (총지출) 당초 본예산 대비 7.0조원 증가한 349.0조원

* 7.0조원 = 총 세출 확대 7.3조원 + 세출 감액 △0.3조원

< 총지출 >

(조원, %)

	'12	'13당초 (A)		'13추경안 (B)		증감 (B-A)
			증가율		증가율	
◇ 총지출	325.4	342.0	5.1	349.0	7.2	7.0
○ 예산	228.1	243.6	6.8	247.7	8.6	4.1
○ 기금	97.3	98.3	1.0	101.3	4.1	2.9

□ (재정수지 및 국가채무) 세입 부족분 보전과 추가세출 확대로 일시적으로 악화

○ 재정수지는 GDP대비 $\Delta 0.3 \rightarrow \Delta 1.8\%$ *로 당초보다 $\Delta 1.5\%p$ 악화

* 경제위기시 관리재정수지(GDP 대비) : '98년 $\Delta 5.0\%$, '09년 $\Delta 4.1\%$

○ 국가채무는 GDP대비 $34.3 \rightarrow 36.2\%$ *로 당초보다 $1.9\%p$ 증가

* 국가채무(GDP대비, %) : 美 102.2, 日 205.3, 英 99.9, OECD평균 102.9 ('12.12, OECD)

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>

(조원, %)

	'12	'13당초(A)	'13추경안(B)	증감(B-A)
▪ 재정수지 (GDP 대비,%)	△14.3 (△1.1)	△4.7 (△0.3)	△23.4 (△1.8)	△18.7
▪ 국가채무 (GDP 대비,%)	445.2 (34.8)	464.6 (34.3)	480.4 (36.2)	15.8

3. 재정건전화 관리계획

- 추경편성,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
- 일시 악화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재정대책도 함께 추진
 -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,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 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
 - 앞으로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
 - 근본적·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*,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 추진

* 사업간 연계·통합, 서비스지원체계 개선, PAYGO원칙 강화 등

⇒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재정전략회의(5월) 등을 거쳐 '13~'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

IV. 주요 역점사업

1.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

3.0조원

【 일자리 창출 강화 】

① (일자리 확충)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(+5만개, 2.8 → 3.0조원)

○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(+4천명)*하여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치안 및 고용·복지 서비스도 강화

* 경찰관 2,955명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,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

○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(18.5 → 20.4만명, 1.5 → 1.6조원)를 통해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대응

*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(2.5 → 3만명), 노인돌봄서비스(1.8 → 2.2만명), 방과후돌봄서비스(0.3 → 0.4만명), 사회공헌일자리(0.1 → 0.3만명) 등

○ 저소득층, 노인·장애인 등에 특화된 일자리 추가 지원

* 지역공동체일자리(20 → 35만명), 노인일자리(23 → 24만명), 장애인일자리(12 → 15만명) 등

② (일자리 창출기반 조성) 청년 창업, 해외 일자리 진출 지원

○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충*, 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개발 추진(50 → 250개, 36 → 168억원)

* 청년전용창업자금(1,300 → 1,600억원),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(500 → 800억원)

○ 「K-Move」 포털 구축(31억원), 현지 취업지원 센터 신설(5개소, 8억원), 해외건설 현장 OJT 훈련(400 → 500명) 등 청년층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적극 지원

③ (맞춤형 취업지원 강화) 수요자 및 현장 중심 인력양성 지원

- 「직업상담-훈련-취업알선」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확대
(22 → 23만명)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
-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기술연수 지원 확대(2 → 3천명)
-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을 통해 40~50대에 대한 현장일자리 취업교육 확대(1.7 → 5.2만명)

④ (직업교육 강화) 대학 및 평생교육의 취업지원 기능 확충

- 지역대학생의 해당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(3.2 → 4.1만명, 2,334 → 2,852억원)
- 중장년 직장인 및 대학 미진학 청년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의 학위·비학위 과정 확충(0.5 → 1.3만명, 171 → 414억원)

【 서민생활안정 】

① (4.1 부동산대책 지원) 서민·취약계층의 주거생활 개선 지원 확대

- 서민층의 주택구입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·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(6.7→7.1조원)
- 주거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 8천호 추가 공급(1.7→2.5만호, 1.0→1.6조원)
-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 0.1조원 증액(0.1→0.2조원)
-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(금년말까지 한시)에 대해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(0.3조원)

② (취약계층·서민 지원)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

-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 완화* 및 대상확대(43→144천건, 625→1,145억원)
* 선정기준: 최저생계비 120 → 150%, 금융재산 3→5백만원
- 노인·장애인·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 대폭 인상(1,359→1,438억원)
* 생계비 단가(월/인): ('12)150,624 → ('13 본예산)159,122 → (추경안)177,625원
-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(53→85개)과 치매관리센터(4→14개) 확대
-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(0.75→1조원)을 늘리고, 소상공인 협업화(6→8천명, 307→407억원)를 확대

③ (보육·양육 지원)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(1,500→1,900개소, 1,504→1,547억원)
-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보육서비스 개발·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(5→10개소, 50→100억원)
-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확대(60→78개소, 498→581억원)

④ (농산물가격안정)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효율화 적극 지원

-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확대(2,144 → 2,644억원)하고, 비축물량도 증대(6,215 → 6,615억원)
-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-소비지 직거래(616 → 1,026억원),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(231 → 381억원) 지원 확대
- 도매시장 거래의 다양화·신속화·안정화 등을 위해 도매시장 정가·수의매매제도* 신규 지원(700억원)

* 정가·수의매매 : 도매시장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정찰제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 진폭 완화, 유통비용 절감 효과

【 국민안심 생활여건 조성 】

① (생활 안전) 성폭력 피해자 지원,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지원 확대

-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추가설치(+1,050대, 88억원) 및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(51억원)
-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확충(285→297억원) 및 전문인력 증원(280→310명)
-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(신규 18억원) 및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
 - *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: 64개소 추가(68→146억원)
 - * 급식소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: 1,400개 추가(73→123억원)
-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(1 → 6개소)

② (유해물질 관리 강화) 방폐물·석면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

- 국가 산업단지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기업체(1,500개)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신규지원(50억원)
- 특수화학차량 2대 추가배치로 현장대응능력 강화(21→42억원)
 - * ('12년) 1대(국립환경과학원) → ('13본예산) +2대 → ('13추경) +2대, 총5대

③ (국가안전)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 위협 등에 대비

-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K-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 및 접적지역 작전지원 능력 강화
 - * 접적지역 경계·방호시설(3,216→4,307억원), 서북도서 요새화(734→827억원)
- 사이버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이트해커 인력양성,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 확대
 - * 화이트해커 양성 60→240명(20→80억원),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 50억원 등

- ① (설비투자 지원)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 및 R&D 장비·시험설비 구축 지원
- 중소·중견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추가 출자(500 → 700억원)
 -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핵심장치 개발 지원 확대(850 → 1,350억원)
- ② (창업 및 투자활성화)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
- 창업자금 1,500억원(11,200→12,700억원), 신성장기반자금 3,000억원(6,350→9,350억원) 및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(1,500→1,700억원) 확대
- ③ (중소기업 자금지원)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·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
- 신용보증 규모를 1.5조원 확대*(57.4 → 58.9조원)
 - * 신보(39→40조원), 기보(18.4→18.9조원)
 - 신기보 출연(1,000 → 1,700억원)을 통해 예비창업자 사전 특례 보증 등을 신설하고,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화회사보증 한도*를 확대
 - * 건설회사의 편입비중을 50%수준으로 하는 유동화회사보증 한도를 업체당 500 → 750억원으로 확대
 -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1,000억원 출연(1,180 → 2,180억원)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3조원 확대(10 → 13조원)
 -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,200억원 확대(5,950 → 7,150억원)

④ (수출 지원)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

- 중소·중견기업 및 취약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 확대(200→1,200억원)
 - * 수출 금융 지원 강화: 74 → 75조원
- 중소·중견기업의 무역거래 리스크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출연 확대(2,000→2,500억원)
 - * 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: 35 → 40조원
- 글로벌 강소 중소·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확대(417 → 517억원, 글로벌 강소기업 80→280개)

※ <참고> 수출금융·보증 지원확대 : 총 10.5조원

- 수출금융 +6.0조원, 신용보증 +1.5조원, 중소기업 매출채권인수 +3.0

3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

3.0조원

① (안전투자 확충) 국민안전 확보와 지역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시설 개·보수 중점 지원

-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긴요한 도로·철도·댐·항만의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(13,514 → 15,957억원)
 - * 위험도로 구조개선(708→1,352억원), 철도 시설개량(2,732→3,332억원) 등
- 재해위험지역정비,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투자(6,812→8,312억원)
- 하수처리장,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으로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(15,417 → 17,645억원)
 - * 하수처리장 확충(4,213→4,460억원), 공단폐수처리시설(3,013→3,627억원)

② (지역산업 육성)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강화

- 음악·만화·패션·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(407 → 607억원),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·마케팅 지원 강화(196 → 246억원)
-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신축·개보수 용자지원 확대(2,920 → 3,070억원)
-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민여가 활용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의 야영장·캠핑장 확충(120 → 150억원)

③ (농촌 지원) 안전영농 기반 및 농어촌 정주여건 지원 강화

-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배수장, 배수로, 배수문 등 방재시설 설치 지원 확대로 이상기후에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 (2,700 → 3,000억원)
- 파손·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등 개보수, 농경지 진입로 확장 등 용·배수로 정비 지원 강화(4,300 → 4,600억원)
-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여건을 개선(1,008 → 1,364억원)

④ (지방재정 지원) '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여 지자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뒷받침

- 취득세 감면연장(6개월)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여 지방재정 보완(약 1조원)
-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(교육교부금) 감액(△2조원)이 필요하나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미조정

⇒ 향후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

V. 기대효과

1. 성장률 제고 효과

- 이번 추경은 '13년 0.3%p, '14년 0.4%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
 - 지출확대(7.3조원) 효과 : '13년 0.1%p, '14년 0.2%p의 성장률 제고
 - 세입경정(12조원) 효과 : 지출규모 삭감을 국채로 보완함에 따라 '13년 0.2%p, '14년 0.2%p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
 - *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부족분(12조원)만큼 세출 불용이 불가피

2. 일자리 창출 효과

- '13년 추경예산을 통해 약 4만개* 수준의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
 - * 연간 직접일자리 +1.5만명, 간접일자리 +2~3만
 - '13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당초 25만명* 수준에서 약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* '13. 3월, 「2013년 경제정책방향」

<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영향 최소화 노력 병행 >

- (전망) 추경으로 인한 국채발행 물량 증가는 시장금리를 20~30bp 내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(대응)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(13조원) 축소, 월별 균등 발행, PD 인수 의무 강화 등의 시장안정 조치로 인상요인 최소화

참 고

분야별 자원배분(안)

구 분	'12년	'13본예산 (A)	'13추경(안) (B)	(단위: 조원)
				증감 (B-A)
◆ 총지출	325.4	342.0	349.0	7.0
1. 보건·복지·노동	92.6	97.4	99.4	2.0
2. 교육	45.5	49.8	49.9	0.1
3. 문화·체육·관광	4.6	5.0	5.1	0.1
4. 환 경	5.9	6.3	6.6	0.3
5. R&D	16.0	16.9	17.2	0.3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15.1	15.5	16.5	1.1
7. SOC	23.1	24.3	25.0	0.7
8. 농림·수산·식품	18.1	18.4	18.8	0.5
9. 국 방	33.0	34.3	34.6	0.2
10. 외교·통일	3.9	4.1	4.1	-
11. 공공질서·안전	14.5	15.0	15.2	0.2
12. 일반공공행정	55.1	55.8	56.2	0.4